

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(CDO) 운영 내실화 방안 [요약]

1. 추진배경

- 데이터기반 과학적 정책 기획과 행정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, 주요국은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중*
 - * (美) 모든 연방정부기관에 최고데이터책임관 임명, 최고데이터책임관위원회에서 데이터업무 총괄
 - (英) 내각에 국가 최고디지털책임자 지정, 디지털문화스포츠부 등에 최고데이터책임관 임명
- 우리 정부도 모든 공공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(CDO) 제도 도입
 -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제21차 전체회의('21.2.17. 위원장 국무총리)를 통해 '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*(CDO)' 신설을 의결
 - * 민간의 최고데이터책임관(CDO: Chief Data Officer) 개념을 행정분야에 적용한 것
 - ※ 총리님 지시: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신설하고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
 - '20.12월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(행안부)」이 시행되어,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도의 법적 근거는 기 마련
- 이에,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도의 도입초기 준비 현황 점검 및 조기 정착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

2.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「데이터기반행정법」('20.12.시행) 및 총리님 지시('21.2.17.) 이행을 위해 행정·공공기관 장은 신속하게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
 - (중앙·지방자치단체) 48개 중앙행정기관 및 243개 지자체(광역17, 기초226) 및 17개 시·도 교육청에서 임명 완료
 - (그 외 공공기관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공공기관 350개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상 지방공사·공단 154개 임명 완료
- (문제점)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에도 불구하고,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필요성에 대한 지적(제1차 데이터특위, '21.3.23.)
 - ① (형식적 운영 우려) 기획·예산 등 업무범위가 넓은 정책기획관 등이 겸임 임명되어, 데이터 혁신 업무가 부가적인 것으로 인식될 우려
 - ② (환경·기반 조성 미흡) 기관장의 관심과 지지,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적 기반 및 정책협의 수단 부족
 - ③ (전문성 부족) 책임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, 특화된 교육·훈련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인해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곤란

3. 운영 내실화 방안

◆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기관의 데이터 총책임자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담지정, 환경·기반 조성, 역량 제고 등 지원 필요

1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전담지정

○ **[전담지정]** 조직 내부 기능조정 등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

- 1)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데이터 관련조직이 기설치된 경우에는 그 조직을 관할하는 자를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·운영*

*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,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 등 사례 참조하여, 데이터 전담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 등으로 형식적 지정된 기관은 재지정

- 2) 데이터 관련조직이 미설치된 경우, 조직 내부 기능조정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전담지정·운영 및 지원조직 마련*

* 보유 데이터의 양이 많고 중요도가 높은 중앙부처 등의 적극적인 노력 요구

- 3) 조직 내부 기능조정이 곤란한 기관은 교육훈련, 직무매뉴얼 등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역량 제고 노력

- 4) 금년도 운영성과 점검* 후, 관련 조직 보강 검토

* 데이터기반행정부 제2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, 데이터 연계·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을 자체 점검하고, 결과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

○ **[유사직위와의 관계 정립]** 업무범위,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관련 책임관 간 기능 재편 추진

- 데이터 수집·개방·활용 등 전략적 연계 추진을 위해 '데이터기반 행정책임관'과 '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' 역할을 동일 직위에 부여

* (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) 공공기관 내부 및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 (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) 공공데이터의 대외 개방 및 제공

- 향후 해당 직위와 지능정보화책임관(CIO)*간의 관계 추가 개편 검토

* 정보 생산·유통·활용 효율화 및 고도화 총괄·지원

② 실질적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환경·기반 조성

- **[기관장 관심]** 기관장은 기관 보유 데이터를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,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역할·권한을 적극 지지
- **[책임관 권한 제도화]**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직제시행규칙·정보화 업무 훈령 등에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보장
- **[내부 거버넌스]** 기관 내 데이터 가치·현황 공유 및 정책 협의의 장으로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중심 내부 협의체* 구성·운영 지원

* (참석대상) 기관장 주재로 간부급 참석(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간사 역할)
(논의내용) 데이터 관점의 정책수립,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

- **[기능 보강]** 데이터 관련부서 실무인력 보강*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보좌

* 중앙부처 공공데이터 역량 제고를 위해 37개 기관 60명의 실무인력 증원 사례 有('18)

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데이터 역량 제고

- **[교육훈련]** 데이터 전문인력 내부 양성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 사례 및 문제해결 중심으로 훈련 프로그램 마련, 개인별 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역량 제고 교육 시행*

* 데이터 분야별 실습형 심화교육, 관리자 대상 데이터 리더십 교육 운영

※ 국가인재개발원·지방행정연수원 CDO 과정 신설·운영, 외부교육전문기관 위탁 등

- **[직무 매뉴얼]** 역량 증진을 위해, '문제인식-전략기획-수립-집행' 등 정책 전과정에서의 역할·책임을 상세히 제시한 매뉴얼 마련

* 데이터관련 역할과 임무를 국내·외 성공·실패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서술

- **[성과 측정]**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업무 성과를 측정할 핵심성과 지표(KPI: Key Performance Indicator)를 개발·활용

4. 향후 추진 계획

-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각 과제에 대한 이행력 제고